



# 한 눈에 읽는

## 주요 환경뉴스

각 분야별 주요 환경뉴스를 한눈에 보다 쉽게 전하는 미디어 섹션 페이지



### NEWS ▶ ▶ ▶

#### '새 가구, 새 전자제품' 사면 꼭 환기하세요!

환경부가 200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원대학교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가구, 전자제품, 의류, 장난감 등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방출량을 평가한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조사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은 전자제품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가구의 방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전원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 주유소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줄인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과 여수·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지역내 주유소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증기 회수장

치(Stage II)를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II)를 의무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 압수된 사행성 게임장 오락기 '재활용'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와 압수물품 보관·관리·재활용 시범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사행성 오락기기 등 불법행위로 의해 동작경찰서에서 압수한 물품의 보관·관리 및 재활용을 담당하게 됐다. 현재 압수된 물품은 단순 파쇄·소각되어왔으나, 이번 협약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재활용되어 자원화할 수 있게 되었다.

### 협 회 소 식

#### 환경부 · 환경보전협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가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가 주관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올림픽공원 88 잔디광장 및 한얼광장에서 민간환경단체,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공기가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란 주제로 저공해자동차 및 전기오토바이 시승, 매연저감장치 전시, 대기오염도 현장 측정 실험, 자전거타기 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세게 차 없는 날”과 병행하여 9월 22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맑은 공기 가꾸기를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이끄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다시금 공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 환경보전협회 “하늘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및 “하늘과 사람 사진공모전” 개최



어린이들에게 맑은공기 보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선우영준)이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가 주관한 “하늘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가 지난 10월 15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상작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작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epa.or.kr)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mamo.me.go.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입상작품은 우수작품 모음집 및 액자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아름다운 하늘과 인간의 조화된 모습, 깨끗한 하늘의 소중함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개월간의 응모기간을 거쳐 “하늘과 사람 사진공모전”도 개최하였다. 총 1,856점이 접수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작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추계 체육대회 및 워크샵 행사 열려...



환경보전협회 추계 체육대회 및 워크샵 행사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부곡하와이(경남 창원군 소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환경분야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본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회가 참석하였다. 이번 추계 체육대회 및 워크샵 행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협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회원사 산업시찰 실시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회원사 상호간 새로운 환경기술의 습득과 타 사업장 환경관리를 비교·분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며, 정보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다. 하이트맥주(주)강원공장,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양주검준염색단지의 폐수처리시설 견학을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회원사 환경기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다.

####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기술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무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 서울본회에서는 지난 10월 23일 ~ 27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중 대기사업장 및 생물학적 공법으로 폐하수를 처리하는 수질분야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화된 기술과 경제적인 운영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교육은 한국환경기술단 박성복

대표이사, 일영엔지니어링 최문규 대표이사가 『소각설비 개요 및 설계기술』, 『다이옥신 저감 방지시설 운영기술』, 『전기집진기 운영기술 및 설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한 교육을 하였으며 환경부 담당자가 개정된 환경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호환경건설팀 이문호 대표이사는 『하폐수처리장 운전시 활성슬러지이상현상의 종류와 진단』, 『활성슬러지 진단방법』, 『활성슬러지 진단의 실험』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국내 · 외 우수사례 및 현장 적용사례 연구 및 토의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기술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 어린이 물 사랑 교육프로그램 추진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는 어린이들이 물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맑은 물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물사랑 교육프로그램』을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3년동안 추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환경보전협회는 초등학교 ·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물사랑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어린이 물사랑 교재를 개발한다. 롯데칠성음료(주)는 교육에 필요한 총 6억원(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환경부는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

어린이 물 사랑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초등학교와 민간단체는 지난 10월말까지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11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 각종 학교와 민간단체에 연간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에게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 롯데칠성음료(주)는 이번 어린이 물 사랑 교육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민과 관의 환경교육 파트너십 구축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내소식

####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 '배출권 모의 거래' 실시

환경부는 발전 · 석유화학 · 제지 ·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4개 업종 중 사업장 굴뚝연속측정장치 (TMS)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부착한 사업장과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5차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또는 국가)이 감축목표를 정한 뒤 줄어든 온실가스 양에 따라 배출권을 획득, 목표량을 줄이지 못한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 중이며, 2004년 1월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모의거래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달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전산교육센터에 실시한 모의거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TMS에 국내 최초로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부착한 발전 · 석유화학 · 제지 · 시멘트 부문의 약 20개 사업장이 실시간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현장감있게 진행이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차 공약기간(2013년)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모의거래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의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측정기 부착 사업

등을 통해 연료 및 시설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내년 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참여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최적의 운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PVC하수관 납 성분 줄인다.

경부와 PVC(폴리염화비닐)하수관 생산업체는 지난달 『친환경 PVC하수관 제조 · 공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향후 단계적으로 PVC하수관의 환경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PVC하수관은 대부분 납(Pb)계 열안정제를 사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나 용출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금속이 환경에 노출되어 사람과 동 · 식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납(Pb)계 열안정제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2007년부터 음용수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 공급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는 친환경적인 대체 열안정제를 전면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PVC하수관 생산업체는 총 10개이며, 생산규모(2005년 기준)는 204.5톤(5,514km)에 이른다.

#### 압수된 사행성 게임장 오락기 '재활용'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와 압수물품 보관 · 관리 ·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사행성 오락기 등 불법행위로 의해 동작경찰서에서 압수한 물품의 보관 · 관리 및 재활용을 담당하게 됐다.

현재 압수된 물품은 사행성 게임장의 오

락기기 1,200대로 이는 재질에 따라 적절한 용도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담당자는 “불법행위로 인해 압수된 물품들은 그 자원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 파쇄·소각되어왔으나, 이번 협약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재활용되어 자원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 의미를 밝혔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각 지역 경찰청 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주유소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줄인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과 여수·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지역내 주유소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증기 회수장치(Stage II)를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주유소에 연료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II)를 의무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중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대기중으로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로 우리나라는 탄화수소류 37종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주유소가 도로변과 주택가에 위치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도시 오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2004년 12월 말에 석유제품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 I)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대한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무화(Stage II)를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 업계와

수차 협의하고, 지난 9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완료했다. 타당성 연구 결과, Stage II 도입시 주유소 1곳당(주유기 7개 기준) 약 1,750만원이 비용이 소요되나, 연간 67억원의 휘발유 회수, 연간 130억원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편익이 발생해, 향후 15년간 주유소 1곳당 순편익이 5000~7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새 가구, 새 전자제품 사면 꼭 환기하세요!

환경부가 200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원대학교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가구, 전자제품, 의류, 장난감 등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방출량을 평가한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조사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은 △ 전자제품 15종 평균 4.86±7.38mg/h, △ 가구류 19종 평균 2.23±5.40mg/h, △ 의류·장난감 등 기타제품 7종 평균 0.047±0.098mg/h로 전자제품의 방출량이 가장 많았다.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 가구류 평균 0.157±0.297mg/h, △ 전자제품 평균 0.056±0.098mg/h, △ 기타제품 평균 0.0003±0.0007mg/h로 가구류의 방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이 미국 민간단체의 ‘그린가드 인증’과 비교하기 위해 제품별 방출량을 시간당 환기율 0.8회의 방출농도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제품의 90%가 그린가드 기준을 충족했다. 초과된 제품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정소기 1종(1.03mg/m<sup>3</sup>), 프로젝션 TV 1종(0.51mg/m<sup>3</sup>)이 생활가전 기준치(0.5mg/m<sup>3</sup>)를 초과했고, 부엌가구 1종(0.28mg/m<sup>3</sup>)과 협탁 1종(0.92mg/m<sup>3</sup>)은 가구류 기준치(0.25mg/m<sup>3</sup>)를 초과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신발장 1종(0.036ppm)이 그린가드 가구류 기준치(0.025ppm)를 초과했다.

그러나, 다양한 새 가구를 실내에 둘 경우 제품별 방출량이 적더라도 제품수가 증가하

고 환기가 부족할 때는 실내공기중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도가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0.5mg/m<sup>3</sup>)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새 책상, 의자, 서랍, 침대 등이 각 1개씩 있는 2.5평의 공부방에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시간당 환기율 0.2회) 실내공기중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도가 1.5mg/m<sup>3</sup>까지 증가했고, 제품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더욱 증가했다.

반면 시간당 환기율을 0.7회까지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오염도가 기준치 이내로 감소해 환기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원을 끈 상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전원을 끈 상태보다 최대 3배까지 증가했다. 환경부는 제품별로 방출량 편차가 커서 40여개의 제품에 대한 이번 조사로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제품군별 정밀 조사를 거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전원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원주청, '07년도 강원·충북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국고 1,401억원 투자

2007년도 강원, 충북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에 국고 1,40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254억 1,600만원이 편성된 것을 비롯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73억 7,900만원, 분뇨처리장 확충사업에 34억 4,700만원 등 강원지역에 1,107억 7,700만원, 충북지역에 293억 5,800만원 등 모두 1,401억원의 예산(안)이 확정됐다. 시·군별로 보면, 강원도의 경우 원주시가 121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평창군 117억 8,400만원, 삼척시 102억 4,900만원의 순이다.

충청북도는 충주시에 103억 8,500만원,

제천시 71억 1,800만억, 단양군 70억 7,200만원 순이다. 예산지원 시설은 춘천시 신북, 음성군 대소 등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사업 6건,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주, 강릉 하수종말처리장 등 5건, 소양강댐 및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0건, 하수관거 정비사업 29건, 분뇨처리장 확충사업 3건 등 모두 86개 사업에 달한다.

현재 강원, 충북지역에는 강원도 17개, 충청북도 10개 등 2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춘천시 강촌처리장, 평창군 도암처리장, 음성군 대소처리장 등 15개 시설(9만 3,800톤/일)이 준공되면 총 77만 1,800톤/일의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게 되어 한강상류 및 동해안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영향평가 단계마다 인터넷 공개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년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T/F』,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사업자, 평가대행사, 환경단체 등과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향평가법 중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http://eiaas.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규모 30%이상 증대 등 증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의 신청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자가 필요시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의무제로 바꾸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초안평가와 본안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되고,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현재 『스코핑 → 초안 작성·협의 → 의견수렴 → 본안평가서 작성·협의 → 사후관리』로 돼 있으나 간이평가 절차는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로 단순화돼 협의기간이 현재 약12개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없이 즉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던 절차가 일단 개선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과태료는 현재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 1조원 규모 하수관거 BTL사업... 중견기업 참여기회 확대

환경관리공단은 지난달 열린 환경민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환경 민투심')에서 시공능력평가(토건분야) 상위 10위 업체간의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시공참여기회를 4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 Request For Proposal)을 심의·의결하고, 사업참여자 모집을 위한 RFP고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고시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하수관거 BTL 17개 사업 중에서 도급순위 10위 이내 기업이 약 35%를 수주해 대기업에 수주가 편중됐고, 모기업은 최대 6건을 응찰해 4건을 낙찰(약 67%) 받는 등 대기업 또는 특정업체에 수주가 편중됨에 따라 대기업 낙찰 편중 막고 중견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시공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30%이상으로 확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비를 조달하고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은 금회 15개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38개월에서 51개월이며 하수관거정비구간 1,299km, 총 사업비 9,984억원 규모이다. 아울러, 올해 29개 하수관거 BTL사업 가운데 환경관리공단이 정책지원키로 한 20개 사업 중에서 금번 심의·의결 대상인 15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 중 장흥군 민자사업은 주무관청에서 고시 준비중이며, 파주시 등 4개 사업은 기본계획용역 수립 중으로 '환경 민투심' 심의·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다.

### 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 대응방안 연구

환경부는 올해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대비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의 환경시장 여건 및 환경법제를 조사한 '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FTA는 잠재적 시장규모와 우리나라 환경산업체 진출 가능성 차원에서 볼때 그간 우리가 추진해온 싱가포르, 칠레, 일본 등과의 FTA 환경 서비스·투자 협상과는 달리 경제·환경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세안의 환경시장은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이와 연계된 선진국의 기업 또는 자체 자금여력이 충분한 선진 기업위주로 환경서비스 시장이 구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환경시장의 규모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각국의 환경법 및 제도가 성숙이 필요한 단계이며 WTO-DDA 협상에서 환경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FTA 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환경서비스 시장진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한 - 우주베키스탄 경제인 오찬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우주베키스탄 대외경제무역부와 공동으로 우주베키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한명숙 국무총리를 초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경제인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명숙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92년에 수교를 맺은 이후, 단시간 내에 교역과 투자, 인적교류 등 경제협력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한국은 우즈베크에게 러시아, 중국에 이어 3번째 교역대상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총리는 “한국은 자동차, 전자, 기계, 섬유 등 산업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즈베크는 풍부한 자원과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오랜 제조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기술제휴와 합작투자 등으로 양국간 협력은 우즈베크 산업의 도약을 앞당기고, 유럽과 러시아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한국측에서는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3단체 부회장, 이용구 대립산업 부회장, 김영호 대한항공 사장 등 양국 경제인 및 정부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양국 경제인 오찬간담회에 앞서 개최된 한-우즈베크 비즈니스 포럼에는 류라예프 대외경제무역부 차관이 우즈베크 투자환경을, 아코블레프 국가

자산위원회 수석부회장이 우즈베크 민영화 협력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측에서는 석유공사에서 한 - 우즈베크 자원개발 협력방안, 신동에너지에서 한 - 우즈베크 기업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 투자전략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9월 19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김순무 대한상의 윤리경영 위원장 등 주요 기업인, 조동성.문국현 윤경포럼 공동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경제계가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회계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윤리경영 정착, 사회공헌활동 강화, 하도급 관계 개선, 이해관계자의 이익증진 등 5가지 실천과제를 담은 ‘윤리경영 이행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내 주요 기업인 등 32여명이 선언문에 서명했다. 손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기업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이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날 행사를 갖게 됐다”고 선포식 취지를 밝혔다. 손회장은 또한 “과거에는 경영을 잘해서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윤리적, 사회적 책임까지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김순무 대한상의 윤리경영위원장(한국야쿠르트 사장)은 경제계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윤리경영 실천 5대 목표 및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경제계는 국민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경영을 더욱 확산시키기로 했다.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국 순회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외이사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확대, 투명경영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리경영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을 유도하고 윤리경영 자율진단 권장안과 중소기업용 윤리경영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